

전주시, 완산구에 혁신동 신설 추진

(가칭)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26일까지 입법 예고… 효자4동 분동하는 대신 행정구역 통·폐합은 당분간 유예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완산구에 (가칭)혁신동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인구 과밀화 현상이 지속돼온 효자4동은 효자4동·5동의 2개 동으로 분동하는 대신, 행정구역 신설과 분동에 따른 기존 행정구역 통·폐합은 당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6일부

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다.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은 향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 조정안을 살펴보면, 완산구에 혁신동과 효자5동이 신설되면서 전주시 행정구역은 기존 33개 동에서 35개 동으로 2개 동이 늘어나게 된다.

먼저, 시는 현재 완산구 효자4동과 덕진구 동산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된 혁신도시(완주군 지역 제외) 행정구역을 혁신동으로 묶어 완산구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혁신도시시는 2개 구·2개 동으로 나뉜 행정구역으로 인해 주민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혁신동이 신설되면, 1만6000명 혁신도시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행정·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 받게 된다.

또한, 약 7만4,800명이 거주하면서 인구 과밀 현상을 보인 효자4동은 서원로(이동교~전주대 신정문)를 기준으로 효자 4동과 효자 5동으로 분동된다. 서원로 남쪽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 4동, 북쪽(서곡방향)은 효자 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다.

시는 당초 혁신동 신설·효자4동 분동과 함께 검토해온 기존 행정구역 통·폐합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이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된 후 오는 10월 전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미8군사령부에 계류돼 있는 헬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간 대응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해제를 합의한 5일 오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이피치(AH-64)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김춘진, 7일 ‘복지와 재정·우리 성장 전략’ 강연

김춘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7일 오후 4시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와 미래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복지와 재정 그리고 우리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강좌에서 효율적인 보건복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에 공감하며 다양한 복지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촘촘한 복지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트럼프 불확실성이 北 핵 위기 키워”

북한이 핵개발로 추구하는 목표는 명료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한 대북 전략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간 인디펜던트는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변덕스럽다는 비판이 많지만 일각에선 북핵 위기가 고조된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은 꾸준하고 진지하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해 왔다고, 국제사회의 불안은 커진 반면 김정은 본인의 북한 내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군축 비확산 선임보좌관이었던 존 울프스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들은 북한이 이성적임을 시사한다”며 “북한은 정권 생존을 추구한다. 핵무기는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치 업체 IHS마킷의 엘리스 에번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번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북한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호전적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 지도부는 미국 위협을 막으려면 (핵무기)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더욱더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한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변화를 거듭하며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울프스탈은 “인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 아래 미국의 정책은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의 예측불가함을 고려할 때 그가 김정은과 직접 협상하려 해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靑 “文·트럼프 통화서 무기구매 대화 없었다”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담 정상통화에서 한국이 수십 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도록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했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념적 승인이라는 말뜻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상통화에서) 무기 구매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백악관과 미국 측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앞서 AFP통신과 미국 CBS 등은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된 백악관 성명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두 정상간 통화에서 현재 미사일 지침이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전격 합의한 이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김관영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달성 위해 최선”

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 예산 4억원 처음 배정… ‘고시’ 이후 10년 만에 본궤도 오를 것 기대

국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김관영 의원은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는 물론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정부예산안에 군산시는 국비 8,800억원을 확보했다. 부처단체 정부예산안에서 3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김관영 의원과 군산시의 대정부 반대 활동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확보한 국가예산 1조 4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국회단체에서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오랫동안 담보 상태였던 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 예산도 처음으로 배정됐다. 지난 2007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고시’ 이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가 더 이상의 자연휴양림 신규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지침을 내놓아 올해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김관영 의원의 끊임없는 대정부 설득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4억원을 반영시키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산림청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산편성 한도 내 배정에 난색을 표하자 한도 외 사업으로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제안하고, 이후 기재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 작업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신시도 자연휴양림 사업의 선제조건으로 제시해온 분수림 계약 해지를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나몰라하는 것은 다분히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설득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의원의 20대 총선 문화·관광 6대 공약의 하나이기도 한 신시도자연휴양림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함께 휴양시설의 부족을 해소해 체류형 고군산 관광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방문객 500만 국제관광도시 군산과 불 켜진 항구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라도 ‘국비 1조원 Again’은 물론 총선공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